

- 하남교산 신도시 지구 -

기업 이전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29일, 3기 신도시의 차별화를 위해 지구 내 기업과 상생하는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정책 방향을 수립함으로써 과거 신도시와의 차별화를 도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한 하남교산 신도시 기본구상은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이다.

하남교산 신도시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는 사업 특성으로 인해 공장, 창고, 물류시설 등이 밀집한 곳을 개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히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전비만 제공하고 강제로 이전하게 되면 기업은 경제적으로 저렴한 비도시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별입지 형태로 이전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그 결과 난개발을 유발함과 동시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증가, 환경오염, 지가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신도시의 자족성 향상만큼이나 기존 신도시 내 기업인들에 대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를 알 수 있다.

하남교산 지구의 경우, 공장과 미등록공장(제조업소)은 약 500여 곳, 그 외 운수, 창고, 도소매업 및 건축물대장상 창고와 같은 중소기업은 약 2,000여 곳으로 중소기업이나 동식물시설 등을 창고로 임대하고, 동장소를 임차하여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비중이 약 81%에 달하는 현실이다.

즉, 하남교산은 81%의 기업이 기업 이전 대책 수립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이전 대책이 필요하다.

하남교산 신도시를 조성하고 공급하는 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영세 기업들의 이전, 폐업 비중이 높고, 이로 인해 재정착률이 상당히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는 공영 개발 사업에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계획 이전시키지 않을 경우, 주변 개발제한구역으로의 개별이전을 발생시킬 우려가 높고 기업 이전 대책이 없다면, 과거와 같은 신도시 개발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가중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기업종사자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비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보상 법상 기업 이전 대책 수립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기업 이전 대책이 필요함이 명백하다.

하지만 하남교산 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기업 이전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흡한 조치로 불만이 지속해서 야기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남시의회는 기업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무너진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주민통합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 : 하남교산」의 이름에 걸맞은 「누구도(어떤 기업도) 뒤에 남겨 놓지 않는다. (No one left behind)」는 원칙에 따라 영세 기업에 대한 포용적인 이전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하남교산 신도시 기업인들이 그동안 제기하였던 이전 관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자족시설용지의 현실성 있는 공급가 반영 등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역정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업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선이전 후철거 등) 이전 대책을 기업종사자들과의 공식적 협의를 통하여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1. 6. 18.

경기도 하남시의회 의원 일동